

보도	2024.1.30.(화) 조간	배포	2024.1.29.(월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	책임자	팀 장	류영호	02-3145-8288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송용준	02-3145-8264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검사1팀	책임자	팀 장	박운규	02-3145-8272
		담당자	검사역	김이슬	02-3145-8276

“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” 중 적발된  
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·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.

## 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“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”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%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하였습니다.

[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현장 특별점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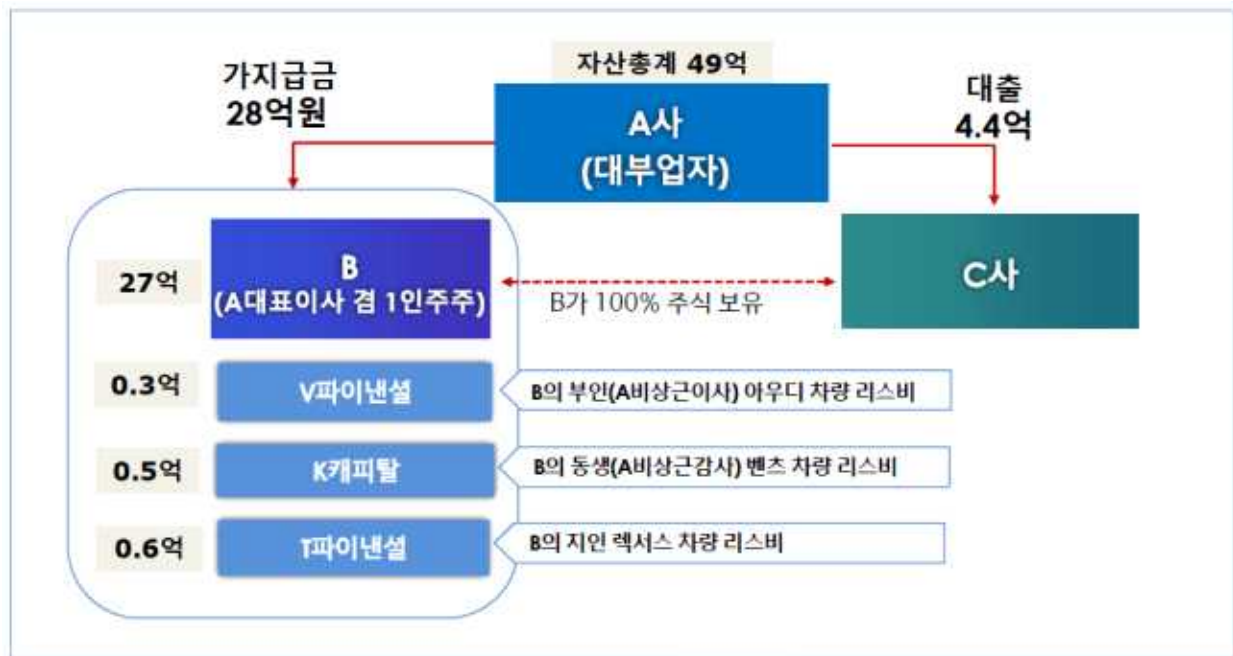
- ◆ 대통령 주재 「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(11.9.)」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 중
- (점검대상) 10개 대부업자 (금전대부 5사,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)
- (점검일정) '23.12.11 ~ '24.1.30.
- (점검내용)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

## II. 사건 내용

- ① (업무상 횡령 혐의)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%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장기간에 걸쳐(2011.8월~2023.12월)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하였습니다.

○ B는 동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,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.

※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·사용한 바,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 제3조(업무상 횡령) 소지



② (업무상 배임 혐의) B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인 C사(B가 지분 100% 보유)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.

○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는 A사에 손실을 끼쳤습니다.

※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바, 「형법」 제356조(업무상 배임죄) 소지

### III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여, 전체 대부업자\*를 대상으로 대주주,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입니다.

\* '23.6월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(자산 100억원 등) 총 963개

-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,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하겠습니다.
- 특히,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습니다.

- 상기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 의식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.

-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·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.